

제41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8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9)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1)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1)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8)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1)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2)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9)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6)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8)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5)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0)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20.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6)
2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3)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6)

25.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강신아 외 53,8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1)
26.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
27.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8. 소위원회 구성의 건
29.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30.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3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9) 3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1) 3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1) ... 3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8) 3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1) 3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3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3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2) 3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3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9) 3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6) 3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8) 3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5) 3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0) 3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3
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3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3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3
20.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6) ... 3
2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3) ... 3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3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4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6) 4
25.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강신아 외 53,8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1)	4
26.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	4
27.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5
28. 소위원회 구성의 건	27
29.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27
30.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8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포함하여 의과대학 교육 점검을 위한 연석 청문회 관련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3)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9)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1)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1)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8)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1)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5)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62)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9)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096)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8)
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5)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0)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5)
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91)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9)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4)
20.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6)
2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3)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0)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6)

25.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강신아 외 53,8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1)

26.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황나연 외 50,46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2)

(10시03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6항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2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차례입니다.

대체토론은 희망하는 위원만 하시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하고 5분 드리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강경숙 위원 대체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패널을 보십시오.

지난 7월 12일 금요일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님께서 AIDT에 대해서 EI,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Education International)이라고 하지요. 국제교육연맹과 같은 단체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공식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한 발언은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티처스 앤드 테크놀로지(Teachers and technology)라는 이런 보고서에 보면 교육에서의 기술들이 학습자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보고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좋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EI의…… 저기 보시면 아시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모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뭘 하는 상황인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 주시지요.

○강경숙 위원 마틴 헨리라고 하는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EI의 연구총괄 책임자인데요. 이분이 지난 12일 금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한 AI 관련 저의 질문에 대해서 장관님이 답변한 것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EI는 178개국 그리고 383개 교원단체, 3200만여 명의 세계 최대의 교원 단체인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EI에 대한 이주호 장관님의 발언에 대해서 허위와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에서 8월 2일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지요. 거기에서 열린 제10차 EI 총회에서는 장관님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있었구요. 그것에 대한 결의안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EI의 집행위원 겸 AFT의 위원장이신데 그분이 학생 간의 디지털 격차하고 또 불평등 심화 그다음에 공교육 재정이 사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EI의 사무총장은, 두 번째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AI 기술은 교사와 학생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다.

또 세 번째, 아까 사진에서 봤던 영상의 그분, 마틴 헨리인데요. EI의 연구총괄 책임자인데 그분은 AIDT의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연구와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발언이 있습니다.

장관님의 발언과 충돌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했던 발언은 EI 같은 국제기구도 특히 강조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기술, 제가 AIDT를 특정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걸 조금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기술들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때 특히 학습자와 교사들의 관점에서 잘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펼쳐 왔던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기술은 어디까지나 기술이고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AIDT는 그런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 같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충분히 존중을 해서 정말 교사와 학습자를 중심에 놓고……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기술이 중심이 아니고 교육이 중심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사실 초점이 조금 흐린 감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효과가 있고 지지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론을 제가 펴는 것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왜곡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요 EI에서는 가령 에듀테크,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 중심으로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저희가 딱 EI의 그런 제안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국제기구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AIDT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강경숙 위원 사과할 의향이 없으시다고요? 제가 회의록도 분명하게 봤는데 그때 장관님께서도 효과가 굉장히 많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교사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제대로 활용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경숙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EI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와 같이 에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이 있어서 전 국민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이번 학폭 실태조사 공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학폭법 상에 매년 최소한 두 번 이상은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폭법 제11조 8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PPT 보시면 학폭법이 있는데요. 연 2회 이상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7월 31일 날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26일 금요일 오후에 그걸 취소했어요. 보도계획 초안에도 31일 날 발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주간 보도계획에도 있었고, 도대체 이것이 왜 미뤄진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것을 장관님이 그러신 건지 차관님이 그러신 건지 용산에서 그러신 건지 장상윤 수석님께서 그러시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학폭 관련해서 조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연기를 한 이유는 실태조사에 전수조사와 샘플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나갔을 경우에 사실 불일치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샘플조사와 전수조사를 다 함께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지 결코 이걸 숨기거나 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조사를 할 때 상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표본으로 조사하는데 상반기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 제11조 8항에 두 번 이상을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을 잘 마련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라는 의미로 공표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실태조사가 엄연히 다른 것이고요. 설령 23년도 2차 실태조사가 늦어졌는데, 그러면 발표하는 것을 조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순신 사태로 인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첫 조사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들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공표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교육감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것에 처해지게 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적시에 수립하고 장관님께서 책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잠깐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학교폭력 문제는 지난 국회 때부터 의회에서든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사항들이 많았고 또 정책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샘플조사 또 전수조사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대책도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두 번 공표하게 되어 있는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학폭 실태 전수조사가 연기됐는데 그러면 언제쯤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 발표 시기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차관님께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발표 시기를 예정해 주시면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더 신뢰를 보내 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번에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표본조사입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표본조사의 결과고요. 금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까지 저희가 분석하고 난 다음에 양자를 다 통합을 해 가지고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 발표 시기.

○교육부차관 오석환 가능한 한 금년 내에 발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금년 내로?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그건 꼭 발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대체토론……

○위원장 김영호 대체토론입니까?

○김문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학폭 사안을 조사할 때 전문인력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실제로 학폭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서 법제화의 뒷받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학폭 실태조사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의심들을 사실은 합니다. 물론 전수조사가 좋기는 하지만 또 표본조사가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전수조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으로요. 분명히 뭔가 수치가 굉장히 악화됐나 보더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추측을.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학폭 문제는 변화가 바로 급격하게 되기는 쉽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역별로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겠다 하는 분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다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필요하면 대책까지도 강구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 있는 정책을 발표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려 주는 게 사실은 좀 뭐랄까, 의심 또 진실성 이런 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김문수 위원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위원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국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이게 또 장관이 이렇게 결정했을까? 분명히 또 용산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또 대부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용산에서 무슨 연락을 받았나’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차마, 아무튼 그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연하게, 이게 지금 보니까 조사해 놓고 발표 기한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아도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미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대표발의라도 해서, ‘조사를 했으면 몇 개월 이내에 발표를 한다’ 이런 걸 규정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김문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대의대 또 법이 올라왔어요. 이러다 보면 각 대학별로 다 법이 올라올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 의대법이, 없는 대학이 전국에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 질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에 따라서는 의대 수요가 정말 절박한 데들이 있습니다, 전남을 포함해서. 또 인천도 지금 이 법안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의료개혁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실 하루하루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의료 사태를 해소하는 것이 지금 저희 교육부로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고, 지난번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그게 해소되고 나면 말씀 주신 그런 지역별 의료 수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도 하고 국회와도 상의해서 진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곧 의대 증원 관련해서 청문회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안건들은 또 그때 가서 한번 다뤄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의대가 없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남도에서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압니다.

○**김문수 위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가지고 어느 대학에 할 건지를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 주시면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한 대학을 해 오라는 뜻이다 해 가지고 한 대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어느 대학이라는 게 꼭 한 대학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목포, 순천 그 둘 다를 전남도에서 지정을 해 줘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두 대학이 공동 의과대학, 대학은 아직 통합은 안 됐지만 미래 통합을 준비하면서 미리 의과대학만 공동으로 해서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선정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대학 중에서 한 대학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두 대학 다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두 대학이 공동 의과대를 하는 게 맞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는 지역의 교육이나 의료 이슈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면 방금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역에서 어떤 걸 선택해 와도 다 가능하단 이 얘기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최대한 존중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논의가 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된다 안 된다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지역예다가 던져 주기는 했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야 답을 정확히 해 올 텐데 그게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교육부에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의원실과 긴밀하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공모를 한다고 전남도에서 하고 있어요. 용역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하는지도 모르는데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정확히 알려 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 교육부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것 공식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45초 아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김준혁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대체토론을 끝내고 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만 해 주셔야 됩니다.

○**고민정 위원** 대체토론……

○**위원장 김영호** 법안 관련된 대체토론이지요?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발의도 했고 김기현 의원님이 발의도 했고 그전에 저희 민주당 정을호 의원님도 발의한 건데, 이게 천원의 아침밥 관련인데요.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면 교육부에서 의견을 이렇게 줬을 것 같은데, ‘천원의 아침밥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신중검토 의견으로 왔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당국의 입장은……

○**고민정 위원** 협의는 하실 테지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당한 예산 부담이 들어서 신중검토 필요합니다’ 이것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현재 몇 개교에 몇만씩 얼마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정도는 좀 어려우니 이런 정도로 조정하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단가를 이만큼 조정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대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할 때도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여당 야당 다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성과를 만들 수 있게 장관님께서 지침을 내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서 위원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청원소위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데 관련해서 학부모하고 교사들하고 이 두 덩어리일 텐데요. 그분들에 대한 수요조사 여론조사 같은 것 해 보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어저께 발표한 의원실 주도로 하신 조사는 잘 봤고요.

저희가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한 1000개 학교에서 시범을 해서 운영한 게 있는데 시범 운영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들도 있고……

○**고민정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지만 선도학교가 아직 검정도 안 됐고 디지털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도학교에서 한다고 해 봤자 그게 AIDT와 동일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AIDT라는 것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고민정 위원** 그래서 전문 영역에서 걱정하는 것은 완성을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도입을 해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도 그러셨잖아요, 완성해 가고 있다고. 무슨 학생들이 실험용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청원소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수준에서 다룰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학부모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해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이 30%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40% 정도.

○**고민정 위원** 그리고 교원 같은 경우는 한 2만 명 가까이 조사에 응했는데 그중에 10%만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AIDT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께서 이렇게 상당수가 반대 의견에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거나 하는 상황인데 당장에 이것을 도입한다고 하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게 우려돼서 그리고 문해력이 저해될 것이 우려돼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나치게 의존할 것이 우려돼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 보더라도 모르겠는데 문해력 부분은 한번 그 교육을 받아야 될 그 연령대의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되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하시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저희 청원소위가 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작은 단위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워낙 큰 사업이고 예산도 지금 보니까 1.2조까지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청문회든 공청회든 좀 규모를 키워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장관님께도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교실혁명이라고 수업을 개선하고 좀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것은 학부모나 교사들이 다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진행을 하면서, AIDT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단이고 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중심이 아니고 사실은 교사가 중심이고 교사의 수업이 중심이라는 걸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교육청별로 여러 디지털 디바이스나 코스웨어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격차도 해소하고 정부 차원에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하도록……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답답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만큼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왜 몰라 주십니까’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든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하든 단계적으로 하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하여튼 큰 단위에서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실시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경청하면서, 실제로 스케줄 자체가 내년에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세 과목을 우선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 자체도 상당히 점진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고민정 위원** 아니, 장관님, 우선 해 보는 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들이니까 문해력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요. 일단 해 보고가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게 완성이 되고 나서……

장관님 하시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계속 반복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그 주체가 결국은 교사들이……

○**고민정 위원** 주체인 교사도 10%밖에는 찬성을 안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사들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계속 연수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하면서……

○**고민정 위원** 연수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비용만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주로 AIDT가 본격적으로 다 개발된 후에 하는 연수에 집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세 과목 또 시작되는 그 학년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교사들이 충분히 본인들이 활용한 그 정도까지만 하기 때문에……

○**고민정 위원** 장관님,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제 자리에서 시계가 진짜 안 보입니다. 몇 초 남은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19초 남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꼭 내년 3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내년에 2022 교육과정이 시작되고요. 또 2028……

○**고민정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과정을 보면……

○**고민정 위원** 그래서 준비가 다 안 돼도 일단은 시작해야 되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정 위원 안 됐다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교사들도 이제 연수를 받고 있고 아직 검정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면 또 달라질 거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준비를 계속 플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고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내년 3학기 때 충분히 준비돼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정부가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는 건 인정하는데 준비가 잘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교원은 10%만 지지를 보냈고요. 특히 국회로도 청원이 5만 명 이상 들어왔잖아요, 국회가 5만 명 이상의 청원 들어온 걸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과 좀 더 논의를 해서 어떤 방식이든 조금 더 공론화를 통해서, 이것을 추진하더라도 단계별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정부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공청회나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의 의지도 한번 국민들께 선보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과 계속 좀 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준비가 됐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토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이십니까?

○정을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조정훈 위원 김대식 위원께서 천원의 밥상에 대해서 같은 법안이라……

○위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만 하셨으니까 김대식 위원님이 한 말씀 먼저 주시지요.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의 김대식입니다.

장관님, 천원의 밥상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대학 현장에서 지켜왔고 이랬기 때문에 무엇보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올해 186개 대학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혜택을 받은 학생들도 있고, 못 받은 학생들의 불만이 또 굉장히 커요.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구체적으로 천원의 밥상……

○김대식 위원 일부, 받은 애들은 계속 받는데 못 받은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양쪽 다 좋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 한번 조사를 하고 어떻게 적절한 수준에서, 꼭 제한적으로 주지는 않겠지만 일주일에 전체 학생들을 골고루 한다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교육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법안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혹시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전국의 국공립대학 말고 사립대학은 지금 16년째 등록금이 동결이 되어 가지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은 반려견 유치원비만도 못하게 대학 등록금이에요. 1년 합하면 사실 반려견의 유치원비보다 대학 등록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현장에서 타개책을, 이것 하면 전국 사립대학들 전부 문 닫으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 적정한 수준에서 교육부에서, 우리가 여야 공청회를 하든 어떤 상황을 하든 간에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가 국회랑 긴밀히 협력해서 검토할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 5만 3000명이 좀 넘어섰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 이게 5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야 간사님께서 의논을 해 주시면 적당한 날짜를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님.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저도 AI 디지털교과서 청원 대체토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 청원동의 절차에 따라 강신아 님을 포함한 5만 3884명의 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국민께서 동의해 주신 만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국민 특히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지 여부부터 국민들과 학부모, 학생, 교사들, 주체들까지 같이 소통하면서 하시면 어떻겠냐는 원초적인 그런 부분부터 고민하고 있고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AI 디지털교과서의 2025년 1학기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현장 적용 등을 거쳐야 하는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행 시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수용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촉박한 일정으로 부실 교과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이 접수됐다는 부분이 단적인 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 예시로 보면,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교육부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인증, 보편적 학습설계 테스트 등에 인증과 검사 도입까지 요구하면서 내년 1학기에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작년 연말에 김진표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서 지금 대규모 교원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사실 대구 현장

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사들이, 막 시작됐습니다. 선도교사라고 해서 1만여 명의 정말 선도할 수 있는 교사들과 만나 봤는데요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이제 막 시작된 연수와 변화인 만큼 기대도 큰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큰 변화의 시작이니까 당연히 우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에 있는 사안이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2022 교육과정의 취지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새로운 변화기 때문에 또 교사들이 아직, 이 연수가 막 시작됐고 오히려 하반기에 15만 명 대상으로 더 많은 규모의 연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런 연수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정부 계획대로 디지털교과서를 검정 심사하고 수정·보완 절차를 거치는 것도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검정을 합격하더라도 기술적 결함이라든가 정보 보안 문제 이런 등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일단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고 가면서 보완하겠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특성이 계속 끊임없이 발전한다 하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검정을 할 때는 기술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정을 할 예정입니다. 검정 스케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특히 교사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받아서 현장 적용에 무리가 없는 그런 교과서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서 시기만 조금 조정하면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 검정 채택 이후에 시범사업과 평가 이후에 하는 것들이 학생들에게도 부담 없고 교육 주체들에게도 좀 더 나은 방향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속 같이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점이 많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큰 변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각 시도별로 AI 코스웨어를 활용하는 시도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이미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늦출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플랜 자체가 몇 과목 또 몇 학년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세계 최초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라는 타이틀에 너무 얽매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흔드는 큰 변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AI 디지털교과서 제작 업체별 역량 차이로 인해서, 교과서 제작에 참여 업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검정에서 기술 부분을 별도로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락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엄격하게 충분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지금 참여한 업체 보니까 아이스크림에듀를 비롯해 7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 업체를 보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이곳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검정하고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지금 검정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언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과서 검인정 절차가 있으니까요. 11월까지 아마 완료될, 8월에 출원해서 11월에 일단 선정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채택되는 교과서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간의 학습 격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격차도 오히려 커지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일단 국가가 검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만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번에도 계속 나왔지만 축적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로 흘러 들어가서 악용될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AI 코스웨어 등 사교육 시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AIDT의 데이터와 체제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을호 위원 규정은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은 확실하게 구분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정을호 위원 지금 업체들이 교과서도 개발하고 이용도 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을호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 업체들의 도덕성만 믿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하도록 저희가 지금……

○정을호 위원 개발하는 업체의 도덕성을 믿고 그냥 선의로 가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정부로서도 지금 명확한 규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문회 때 이야기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을호 위원 네 번째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 학교 네트워크 관련해서 아직 좀 빈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K-클라우드를 다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3월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

다.

○정을호 위원 지금 1GB로 깔려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제가 받기로는 2GB에서 3GB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학교에서 충분하게 가능하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학교마다 학생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고요. 그래서 학교 사이즈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AIDT가 구동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 점검은 학교마다 다 하고 있다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다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정을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2GB라든가 그 부분이 안 되면 그 부분들은 보류가 되나
요, 그 학교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확대를 바로 하도록 저희가 교육청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려점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만의 우려점이 아닐 것 같아요. 학부모라든가 모든 분들의 우려점인 부분들이니까 도입할 때 많은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말씀, 그 네 가지 다……

○정을호 위원 말씀드렸지만 어느 명분에 너무 사로잡혀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네 가지 사항 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지금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무슨 업적을 내기 위해서 현장에 무리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학생들이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자기들이 실험 대상, 아까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험 쥐라는 자기가 교육 당국의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간사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지금 대체토론하고 있는데 마침 또 청원에 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AI 기반에 대한 디지털교과서 도입,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있는 위원 모두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은 맞습니다. 저도 디지털교과서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95년인가요,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5·31 교육개혁을 하면서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굉장한 논쟁이 벌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도입한 게 맞은, 옳은 결정이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점점

최적화된 교육을 시키자. 그런데 AI를 도입하려면 디지털 수단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이로 AI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정을호 위원님이나 고민정 위원님 등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히 부작용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준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독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종이에 비해서 문해력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둘 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중독의 문제는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문해력의 문제는 이게 개인적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녀만 해도 종이의 문해력과 디지털의 문해력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저는 종이의 문해력이 높습니다, 고백하면. 이게 다 나이 탓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민정 위원** 연구 결과가 있어요.

○**조정훈 위원** 예?

○**고민정 위원**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문해력에 대해서.

○**조정훈 위원**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비록 제가 여당 간사지만 지금 한 번은 털고 넘어가겠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다 한번 만들어서……

○**위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방향성은 다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논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

그리고 교육부도 제가 기억하건대 세계 최초의 AI 교과서 도입 이거에 목매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교육부 전문가들이 판단하실 때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야당 위원님들은 아직 아니더라고 판단하시는 거니까 교육부를 넘어서 디지털 교육 전문가, 아이들 발달 전문가, 학부모들 다 불러 놓고 괜히 쓸데없는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합리적인 답안이 나오면 민주당 위원님들도 지지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럼요.

○**조정훈 위원** 합리적이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답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이렇게 뜨문뜨문 대체토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하여튼 조정훈 간사님의 좋은 제안 야당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속도에 대한 문제,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정부 측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대체토론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김민전 위원** 사실 AIDT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요. 이미 결론을 내셔서 제가 또 더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24항까지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25항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 법안소위 위원장님, 김대식 청원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십시오.

이제 안건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가 끝났고요. 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할 텐데 이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이주호 교육부장관님을 일자리로 보내 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장관님 계실 때 하실 분은 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면 장관님은 일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정 지역의 김준혁입니다.

원래 의사진행발언은 학교용지부담금 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AIDT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원래 ‘사암’이라는 호를 갖고 계시다가 또 자기 고향 그 일대가 한강이 열수여서 ‘열수’라는 호를 갖고 있다가 ‘여유당’이라고 하는 호를 나중에 지으셨지요.

여유당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유(猶)’라고 하는 것이 큰 코끼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빙판이 얼까 말까 한 지역에 큰 코끼리가 그 얼음을 건널 때 조심조심해서 삼가고 또 앞으로의 닦쳐올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걸 지으셨어요.

저는 지금 AIDT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정말 거대한 코끼리가 AIDT 교육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조심조심해서 건너서 잘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이 여야 국회의원 모두와 장관님이나 교육부 관료들 또 우리 국민들의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조심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건너면서 합의된 과정 속에서 차분히 하자라고 하는 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법률안이 30건입니다. 30건 안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된 법률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정부가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7월 23일에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중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7월 26일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김영호** 뭐 특별히 보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김준혁 위원** 맞습니다. 통상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정부 발의를 할 때 국무회의 통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 교육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태도를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뭐 어떤 것이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개발사업으로 사적 이익을 얻을 때 학교 신설 수요를 창출해서 공공의 비용을 발생하게 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분양가로 전가되는 준조세 성격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계획된 부담금만 3598억 원입니다. 이렇게 액수가 큰 중요한 건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먼저 국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또 협의도 거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와 협의하지 않은 정부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그대로 통과시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에 교육부가 대체 왜 동의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국민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담금이 없다고 학교 신설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사라진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부담금 폐지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금이 없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신설해야 합니다. 준조세를 폐지해서 국민 부담 줄이겠다고 해 놓고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짓는다면 이것 역시 조삼모사입니다.

게다가 주택 수요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부담금 폐지의 혜택이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기업 이익금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학교 신설 비용을 조세 부담하게 되면 개발사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 따로 있고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에 예산 지원이 편중돼서 세금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특정 지역, 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이익을 위해서 투입되는 불합리한 결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사업하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교육청도 세수결손 때문에 기존 사업 축소하거나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하면 정말 학교 신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신도시 또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학교 안 지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안과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사실 대체토론 때 해 주셨으면 정부 측의 입장을 듣겠는데요.

○**김준혁 위원** 대체토론을 다음에 다시 하려고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안전 상정이 돼서 법안소위로 넘어가니까 문정복 간사님과 여야 위원님들이 김준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사진행발언……

○강경숙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영호 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오늘 굉장히 많은 주제가 AIDT에 관한 것이었지요. 그 문제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심각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 그리고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은 다 공유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은 기술혁신을 막는 러다이트운동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AI라는 것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변화를 우리가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조정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5·31 교육개혁에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교실혁명과 디지털화되는 것이라든지 여기서 빗댈 수는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방법을 문제로 삼는 것이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닌데,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요 아까 장관님께서 2022 교육과정이 2025년도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전에 1·2학년 것도 이미 서책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보통 서책이 개발된 다음에 디지털로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려고 했던 특수에서 국어 3학년 것은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충분히 유예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간이나 시기를 조정 가능하다는 것의 입증인 거거든요. 왜 이렇게 굳이 서둘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조 이상의 예산이 드는 것이고 리터러시(literacy), 아까 고민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다 담보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교육 얘기거든요. 실제로 교실혁명은 토론하는 힘, 생각하는 힘,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힘 이런 것들이 정말 일어나야 교실혁명인 거예요. 어떤 틀만 디지털화돼 가지고 종이로 보는 것을 컴퓨터로 본다고 해서 아이들의 근력이 생기고 뭔가 사고하는 능력이 길러져서 국제경쟁력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기에 대한 것도 정말 제대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EI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굉장히 중요한 교육단체인데 여기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장관님께서 분명히 그전에도 여기 지지자가 많다 그러셔서 사고하는 것에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는 이 시기에 대한 것 그리고 아까 말씀에 굉장히 오류가 있는데 3·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2022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미 1·2학년 것도 개발이 됐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 디지털교과서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해요?

○강경숙 위원 아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이것이 여야 위원님 또 정부 측도 다 듣는 얘기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자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위원님들의 발언을 직접 실명을 거론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당 위원님들이 혹시 야당 위원님들 발언에 반박을 하실 때는 ‘야당 위원님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라고 실명은 대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상호 존중을 잘해 주시는데 간혹 실명을 언급하면 또 반박되면서 의사일정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는 ‘여당 위원님 중에, 야당 위원님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진선미 위원 지금 장관님이 이석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호 예, 의사진행발언 끝나고요.

○진선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발언을 또 한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셨고 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위원장 김영호 위원장실에서도 보냈는데?

○진선미 위원 그래서 지금 5만 분이 넘는 분들의 청원을 통해서 저희가 복지위까지 해서 연석회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제출이 안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서 별도의 논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안 주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자꾸 만드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라도,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대 정원 확대가 가져올 이후의 엄청난 영향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의 질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니까 가시기 전에 장관님께 한번 말씀을……

○위원장 김영호 100% 공감합니다.

다시 정부 측에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장실의 명의로도 자료 요청을 했고 장관님, 차관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렸는데 왜 국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료제출을 안 하십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시다시피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지 않는 한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예요.

이것 저희가 자료제출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꼭 그렇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출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선미 위원 잠깐 첨언……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첨언하자면요 사실은 무슨 개인적인 소송에 관한 거라든가 국가 대외적인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요청하면 최소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자료를 들고 와서 검토는 하게 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지기수로.

○위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선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지금.

○위원장 김영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의원 및 사무보조자가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서류 제출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해할 우려를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든 어떤 사적인 정보가 있을 때도 의원들이 국회법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인지했을 때 그것을 누설하면 의원들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 안전장치도 돼 있단 말씀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님 모두가 자료제출 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가 없다는 걸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를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또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이 지금 미진했던 부분은 아마 실무 차원에서, 지금 의료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돼 있고 또 사실 그 고조된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하루하루 환자들이 입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자료제출이 그런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하는 부작용을 또 실무 차원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그걸 왜 교육부에서만 고민을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는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래서 의회와 저희 정부가 함께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호 장관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사유는 국회법 위반이에요, 명확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굉장히 보안을 유지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정부 측에서 여야 위원님들께 이런 보안 유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김영호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을 하지 않도록 금지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정부의 보안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인지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안 유지에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상호 믿어 주시고.

결국은 정부나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시고 신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시지요,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대체토론에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 저는 그냥 간략하게 교육부에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실험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느 나라의 교육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반복적이고 거의 비슷한 논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돌이표처럼 계속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의 실질적인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육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 쪽 하시는 것 보면 쟁점이 한 일곱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지금 다 체크하셨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거시적으로는 학생들의 문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가 아직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해도가 낮다는 부분, 여론조사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샘플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속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부분 그다음에는 그 교과서 자체, 이걸 미시적인 거지요. 교과서 자체의 심사나 수정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기술적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이것을 다수의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할 때 접속량이라든지 데이터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게 문해력이나 디지털 문해력을 증가시키느냐 낮추냐, 이런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술적인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 일고여덟 가지 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게끔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저를 좀 쳐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서지영 위원 예,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보좌진들 대상으로는 한 번 한 것 같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설명을 해서 불필요한 공방이 오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요청드릴 부분은 지금 유보통합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교육계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유보통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교사 자격이 부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거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 자격을 일원화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관님, 서지영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김영호 아까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교육부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건 알겠는데요. 거기에도 위원님들과 정부 측과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많이 연락을 받으시는데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도 답변을 못 하고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유보통합도 저희가 위원님들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를 하든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마무리하고요 안건 처리를 할 텐데요. 그 전에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공무원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7.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7항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63조 및 65조 등에 따라 우리 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한 과정을 살피고 정부 및 대학의 대응과 대책을 점검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혼란을 수습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실시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관 위원회인 우리 교육위원회는 청문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인으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두 소위원회가 연석으로 8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본관 529호에서, 참고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실이 비좁은 관계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을 이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당일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황보고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신문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실시계획과 소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하면 오후에 보건복지위원회도 청문회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배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확인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간사와 협의하여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으로 각각 진행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보건복지위원회는 답변 시간 포함하지 않는 5분 질의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7분, 5분, 3분…… 상임위에서 주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해 왔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김민전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지금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아마 법사위원회에서 ‘청원 청문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법 어디에도 청원청문회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문회라는 이름이 들어감에 따라서 앞에 위원장님도 증언·감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청문회라고 하면 이것이 국정조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법사위원회가 입법청문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청문회라고 한다면 국정조사와 관계된 것으로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는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고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국회법 제65조를 저희가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과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문회라는 표현이 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국회법에 근거한 하나의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사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라고 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위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전 위원** 해석 그 자체로 문자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보면 청문회는 국정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국정조사가 아닌데 마치 국정조사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위원장 김영호**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좀 결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김민전 위원**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장 김영호 이번에는 저희가 청문회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저희가 청문회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가 이견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들이 특별히 이견 없이 합의를 해 주셨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2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28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앞서 의결한 청문회를 주관하고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학교육소위원회 정수는 위원장 포함 11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소위원장을 맡아 연석 청문회를 주재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배부한 유인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의사일정 26항 청원은 의학교육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29.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11시13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9항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청문회와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모두 75개 기관 대상 1892건입니다.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기관이 8월 13일 10시까지 요구받은 자료를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시는 오전 10시를 뜻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제출이 보건복지위 자료제출 포함입니까?

- 위원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양 상임위……
- 위원장 김영호 같이 확대,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시14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30항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신청을 거쳐 간사 간 협의하여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한 증인은 6명, 참고인은 15명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의 성명, 신문의 요지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증인 등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와 협의해서 양 기관의 장관 차관 네 분 포함해서 원래 총 스무 분으로 저희가 증인 및 참고인을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중에 증인 한 분인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심사위원장을 성명불상으로 해서 저희가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지금 양당 간사 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인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조정훈 간사님께서서는 그런 선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당 간사가 합의한 결과 그러면 증인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의과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배분 근거와 배분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증인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한 분을 참고인에서 제외해서 총 열여덟 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정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와 관련해서 반드시 와야 된다는 조건이 붙은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과 관련한 배분 근거와 배분 과정에 관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심사위원장은 다시 증인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이랑은 이것은 논의해서 합의하신 거지요?

○문정복 위원 예, 논의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실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자료제출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직접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야 간사님께서 성명불상의 위원장께서 출석을 안 하는 대신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니까 두 간사님의 의견은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료제출뿐만 아니라 이 증인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문정복 간사님께서 오전에 상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청문회를 연속으로 하는 마당에 배정심사위원회의 역할 그다음에 결정 내용이

중요한 질문 사항이다라는 걸 동의합니다.

다만 저도 교육부에서 보고를 받기는 이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모든 위원들에게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물론 박스를 세우고 비공개 증인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목소리 변조 등등이 안 되기 때문에 신변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황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또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진선미 민주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요청에 최대한 부합하게, 다만 이제 관심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정심사위원회에서 한 내용 특히 각 학교가 요청한 의대 정원과 실제로 배정한 학생 숫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리고 어떤 근거로 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요청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로 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 배정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실 정도의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공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실 이번 청문회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훈 간사님께서 충분히게 진심을 갖고 말씀을 주신 부분을 또 문정복 간사님께서 잘 수용하셔서 합의하셨으니 저도 우리 위원회가 좀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 말씀처럼 자료제출이 꼭 원만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두 간사님과 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성명불상 이분 빼고 다음 페이지에 양오봉 그분을 제외하는 18인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행정실장님, 그렇게 18인으로 확정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예정한 안건 처리를 마쳤고요. 청문회 관련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휴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중단된 채 갈등만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우려스럽습니다. 학생들은 집단 유급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나섰습니다. 학생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문제를 명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과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도 점검해서 정부가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지금 딱 막혀 있는 이 문제가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국회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뜻에 공감대를 갖고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주신 조정훈 간사님 문정복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초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어떤 명분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정부도 명심하고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문회 자료제출 및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말씀 더 언급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서류 등 제출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을 때에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증언·감정법이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고 이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 다른 법률을 들어 자료를 미제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과대학 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국민 여러분의 염려와 불편을 해소하려는 청문회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해서 관계기관과 모든 증인, 참고인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징계 요구와 고발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오늘 김문수 위원님과 고민정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는 답변 내용과 함께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넘게 열띤 토론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의학교육(11인)	◎김영호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진선미	더불어민주당(6)
	김대식 서지영 정성국 조정훈	국민의힘(4)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강경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5인)

성명	직업	신문요지
이주호	교육부장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과 해당 정책의 실효성 및 발전 방향
오석환	교육부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실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과 해당 정책의 실효성 및 발전 방향

참고인(13인)

성명	직업	신문요지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정부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교육여건 실상 확인 및 의대생 휴학 사태로 인한 학생 유급 대비책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비대위원장	정부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교육여건 실상 확인 및 의과대학 현장 교수진에 대한 입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의대 증원 관련 ‘주요변화평가계획(안)’ 발표에 따른 교육부와 의 갈등, 평가계획의 구체적 내용 및 실효성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정부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교육여건 실상 확인과 의대생 휴학 사태로 인한 학생 유급 대비책, 최근 의평원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 입장에 대한 청문
박 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내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현상 및 정부의 대응 실패, 의료현장 내 전공의 근무여건 및 종합개선 방안
안기중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계 집단사직·이탈 현상에 대한 국내 환자단체 입장 및 환자 처우 개선에 대한 종합 청문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지방의료 현실 및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	의료대란 관련 국민적 피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과 의료대란 관련 피해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의료대란 관련 국민적 피해
전용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	의대 학사 가이드라인 관련 현장의견

○출석 위원(14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서지영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청가 위원(1인)

백승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연석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
정책기획관 배동인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교원학부모지원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관 소은주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김천홍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